

식품안전처 신설은 재고되어야 한다



윤 석 원 교수
중앙대 산업과학대 학장

1. 우리나라 농축산식품의 안전관리 현황

우리나라 농축산식품의 안전관리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가축방역·위생·안전관리 전문 인력과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농림부에서 계속 담당해 왔으나 지난 1985년 식품위생 업무를 일원화하겠다는 명분하에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당시 보건사회부로 이관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1995년 소비자 단체 등의 개정요구에 따라 2년 여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1998년 7월부터 다시 농림부로 일원화하였다. 개방화 시대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의 축산식품을 생산·공급하여 소비자보호와 더불어 축산관련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행정쇄신 확정과제로 제도 개선을 단행한 것이다. 축산물가공식품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주관 책임부서를 대다수 선진국과 같이 생산부서인 농림부로 일원화하여 생산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종제품의 유통·판매단계에서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즉 가축의 사육에서부터 도축·가공·보관·운반·식육판매점까지의 104개 축산가공품의 위생관리업무는 농림부에서, 음식점 및 슈퍼마켓을 통한 소비단계에서의 축산물내 유해성 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및 첨가물의 사용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지도·감독토록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축산식품의 안전관리체계는 오랜 시행착오의 과정을 겪으면서 정립된 사안으로 하루 이틀에 정립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영국 등 선진국에서 광우병(BSE) 등이 발생하고 중국산 꽃게에서 납이 검출되는 등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는 커지고 있는데 식품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담당 부서의 적절한 사전·사후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2003년 8월 국무조정실에 식품안전T/F를 구성하여 식품안전행정체



농축산업의 발전과 기축 방역, 농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 품질제고 노력이 현행처럼 일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옳으며 식품안전처로 안전부문만 이전해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식품안전처의 설립은 재고되어야 한다. 오히려 모든 농축산물 및 식품의 안전관리업무는 생산부서인 농림부의 산하로 일원화하여 가칭 '식품안전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농축산식품의 안전성관리는 이제 농축산업의 유지·발전에 필수적인 요건이자 국민건강에 절대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계 개편 및 식품안전종합대책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05년 7월 현행 부처별 관리체계를 유지하되, 총리 산하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립하여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기로 결론을 보았다.

그런데 2005년 9월 말라카이트 그린, 동년 10월 중국산 김치 기생충 알 검출사건 이후 식품안전행정체계 개편 필요성이 또 다시 제기되자 2005년 11월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 2006년 3월 2일 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식약청을 폐지하고 식품안전처(차관급)를 총리실 산하에 신설하기로 했다. 농림부 소관 축산식품의 도축·가공·유통업무와 식약청의 식품관리업무를 식품안전처로 이관하고 식약청의 의약품관련조직은 복지부 본부소속 조직으로 개편하는 안을 통과 시켜 2006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안에 대해 문제제기가 지속되자 2006년 8월 현재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2. 축산식품 안전성 이원관리의 문제점

사실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는 생산부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식품안전처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정

부의 주장에는 말라카이트그린, 김치 기생충알사건등이 발생하는 요인이 관리체계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이다. 즉 모든 품목을 한 기관에서 관리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한 품목을 여러 기관에서 관리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이원관리는 식품위해사고 발생시 생산단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결여되어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렵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지는 고질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1985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던 축산물위생관리업무를 1997년 다시 생산부서인 농림부로 환원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그동안의 식품안전업무 추진체계를 장황하게 정리한 것은 그만큼 안전관리업무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 오면서 현재의 축산식품 안전관리는 농림부에 일원화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축산식품의 경우 생산과 가공·유통 등을 일괄적으로 생산에서부터 관리하는 것이 옳았고 그것은 세계적 추이이기도 하다. 최근 안전관리체계를 재조정하는 모든 선진국의 경우 생산과 유통·가공분야의 안전성업무를 분리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유독 우리나라만 축산식품까지도 생산과 가공·유통부문 안전성관리를 분리하려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으며 이런 개편안을 밀어붙이려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중차대한 사안을 밀어 부친다고 될 일인가?

3. 농축산업에 이해없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려 하지 않는지 안타깝다. 축산식품의 경우 축산업계의 양축 농민, 단체, 학회는 물론 생산과 가공, 유통을 담당하는 모든 주체들, 심지어 일반 소비자대표들까지도 한 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하면 이를 경청하여 정책에 반영하면 되는 것을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농축산업에 대한 이해도 없이 탁상에 앉아 이리 저리 줄을 그어 획일적으로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아는 행정편의주의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개방화 시대에 우리의 축산업은 위기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서 축산업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품질제고와 안전성 수준을 높여 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방법 외엔 없음을 인식하고 있다. 품질제고와 안전성 확보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생산단계에서부터 가축 질병의 방역은 물론 농약, 항생제, 중금속 차단은 물론 집유, 도축, 가공 등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집중 관리해야만 안전성도 확보하고 축산업의 생존과 경쟁력확보가 가능하다.

4. 식품안전처 설립 재고되어야

그러나 정부가 구상중인 식품안전처를 설립하면 함께 일괄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생산단계의 안전관리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 안전성 강화 없이 산업의 발전을 가져오기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농림부도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비롯해 이력추적제,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시스템)의 전 과정에의 확대 등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과정은 물론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 및 가공, 유통 등 전 과정에서의 일괄적인 안전성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농축산업의 발전과 가축 방역, 농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 품질제고 노력이 현행처럼 일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옳으며 식품안전처로 안전부문만 이전해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일을 그르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구상하고 있는 식품안전처의 설립은 재고되어야 한다. 오히려 모든 농축산물 및 식품의 안전관리업무는 생산부서인 농림부의 산하로 일원화하여 가칭 '식품안전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농축산식품의 안전성관리는 이제 농축산업의 유지·발전에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이다. **양준**





2006년 축산현안 해결을 위한 축산인 결의대회 개최

— 한·미 FTA 등 6대 축산 현안 해결을 위해 전국 순회 개최

한·미 FTA, 식품안전처 신설, 도축세 폐지, 농지법 개정, 기반시설 부담금, 가축분뇨 자원화 등 6대 축산 현안 해결을 위한 축산인 결의대회가 전국에서 전 축산인들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남호경·전국한우협회장)는 지난 8월 24일 경기·강원지역(이천설봉호텔)을 시작으로 25일 충청(천안상록리조트), 29일 전라(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9월 1일 경상지역(대구컨벤션센터) 등에서 양돈협회를 비롯한 생산자단체 회원들과 지자체 단체장 및 축산 관계자, 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초청,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8월 24일 약 300여명의 축산인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 결의대회에서 양돈협회 최영열 회장은 “당면한 축산현안에 대해 우리 축산인 스스로가 힘을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도 축산인의 생존권 투쟁을 도외시 말고,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축산현안 해결 촉구’를 위한 축산인 결의대회에서는 한·미 FTA 관련 특강과 현안 토론회를 갖고 이달 5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FTA 3차 협상에 맞춰 전국 시·군에서 동시 협상 저지 총 쫓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축단협은 이 같은 축산현안 해결을 위한 활동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0월말까지 ‘축산발전을 위한 모금 운동’을 전개기로 하고 범 축산업계가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축단협은 지난 8월 23일 김영덕 의원(한나라당, 의령·함안·합천)실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중회의실에서 도축세 폐지와 관련한 ‘지방세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도축세 폐지에 관한 여론을 모으기도 했다. **양돈**